

6.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9월 6일
- 발 의 자 : 이진련 의원, 강민구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 상정일자 :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9월 20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진련 의원)

□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추모사업 등 지원 사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며, 원폭피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원폭피해자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안 제1조~제2조)
-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추모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안 제4조)
-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목적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추모 사업 등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9조**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지원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나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의료 및 상담지원, 추모 사업 등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며, 원폭피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원폭피해자법」에는 피해자의 후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며(2019.4.25.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 조례에서도 원폭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원폭 피해자 본인이나 후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함과 사회적 차별 등을 고려할 때,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후손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 다만, 대구시에서 원폭피해 사진전시 및 거리 홍보, 추모행사 등을 위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에 시비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폭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 의 | 답 | 변 |
|---|---|--|---|
| 대구시의 원폭피해자가 3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건강수첩 소지자인지? | | 미소지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음. | |
| 직접 피해자 이외에 2세 등에게도 유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부터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